

## 201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 요약(Executive Summary)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도 북한인권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9월 2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통제, 감시, 처벌 시스템에 놓여있다.” 라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거의 어떠한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나 처벌 여부 검증이 여전히 어려웠으며 같은 이유로 북한 내 종교 단체나 신도 수도 추산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NGO)는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 120건과 실종 90건을 포함하여 총 1,341건이라고 보고했다. 기독교 권익 운동 NGO 인 오픈도어즈 USA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국가를 나타내는 연례 박해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1위로 꼽았다. NGO와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기독교인을 구금한 사례에서 자주 연좌제를 적용하였다. 한 탈북자는 가족 중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 일부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기독교인이라서 처형된 가족 구성원도 있다고 밝혔다. NGO 들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무속 신앙 및 ‘미신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고했다. 3월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점술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영터리 재판 이후 2명의 여성을 공개 처형하고 또다른 여성은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파룬궁 신자들에 대한 단속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은 주민들에게 파룬궁 신자일 경우 자진 신고하라고 공표하였다. 해당 지침이후 평양의 선교구역에서 파룬궁 신자 100명을 체포하였다. 9월 크리스찬 포스트는 한 NGO 가 기독교인들을 “종교적 광신도”이자 “스파이”로 묘사한 정부 영상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종교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관용하는 시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인가 받지 못한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은 인가받은 평양의 교회에서의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으며 한 NGO는 해당 교회들도 순전히 ‘선전상’ 존재할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에서 기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나 지하 종교 조직의 범위는 여전히 수치화하기 어려웠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충성하지 않는 자로 분류되고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 및 NGO는 승인받지 않은 종교 물품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교를 가진 모든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12월 유엔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채택된 북한의 “오랜기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2001년 이래 북한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히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되어왔다. 12월 18일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와 함께 1974년 제정된 무역법(잭슨-베닉 수정조항) 제402조와 제409조, 그리고 동법 제402(c)(5)호에 따라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

## **섹션 I. 종교 인구 구성**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50만 명(2019년 중반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 종교별 인구를 보고하였고, 전체 신자 수와 각 종교 단체의 숫자는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북한이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북한 내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 그리고 19세기 한국 성리

학에 기원을 둔 현대 종교인 천도교 신자는 15,000명이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종교인 수가 북한 당국이 보고한 것 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 기독교 신자 수를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으며, 오픈도어즈 USA는 3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독교연구소(CSGC)에서는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구소(CSGC)는 2020년도 세계 기독교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 인구 58%가 불가지론자, 15%가 무신론자, 13%가 '신흥 종교신자'(혼합 종교 신자), 12%가 '민족 종교신자'(토속 신앙), 1.5%가 불교, 그리고 기타 기독교, 이슬람교, 중국 민간 신앙은 다 합쳐도 0.5% 미만이라고 밝혔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약 24퍼센트에서 2002년 0.016퍼센트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무속인과 상의하고 주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다고 하지만 수치화하기 어렵다. 한국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러시아정교회 신부 5명이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고하였다.

##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토대**

헌법은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공식 정부 문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보건,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그 외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제공된다.'고 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돈이나 물건을 받는 대가로 미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여기에는 점술

행위도 포함된다. NGO 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위의 두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된 종교 물품을 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 정부 관행

정부는 거의 어떠한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나 처벌 여부 검증이 여전히 어려웠다. 2014년 COI 최종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많은 경우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9월 20일 토마스 오헤아 쿼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많은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하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도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통제, 감시, 처벌 시스템에 놓여있다.” 라고 보고하였다.

NKDB 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2007 년부터 2018 년 12 월까지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구체적 사례를 1,341 건으로 집계했다. 그 내용으로는 선교, 종교 물품 소지, 종교 활동, 종교인과의 접촉 등이 있었다. 북한 당국이 연루된 1,341 건 중 사망자는 120 명(8.9%), 실종자는 90 명(6.7%), 부상자는 48 명(3.6%), 송환자 또는 강제 이주자는 51 명(3.8%), 구금자는 794 명(59.2%), 이동제한자는 133 명(9.9%), 기타 처벌을 통한 박해를 받은 자는 105 명(7.9%)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 NGO는 2013년 종교 활동을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해 8만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상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월 오픈도어즈 UK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에서 7만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기독교 신자를 구금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기독교 신자의 친척은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했다. 한 탈북자는 가족 중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 일부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처형된 가족 구성원도 있다고 밝혔다.

9월 CSW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끔찍한 여건과 잔인한 고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SW는 성경을 소지하다 적발된 주민이 처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무속 신앙은 북한 내에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행해져 왔으나 NGO들은 평양을 포함한 지역에서 무속행위가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RFA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상 거래를 하기 전 또는 기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을 보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NGO들은 정부 당국이 무속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당국이 공개 재판을 열어 점술행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3명의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 2명은 공개 총살되었고 또다른 여성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이 여성들이 칠성교라는 것을 만들어 두 동자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 대학, 가정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강제로 공개 재판과 처형을 지켜보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국자들도 점술가를 찾아가거나 기타 ‘미신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차원이었다.

오픈도어즈 USA는 자체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국가 목록에 북한을 18년 연속 1위로 꼽았다. 오픈도어즈 USA는 외국 선교사 체포 및 납치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현장에서 즉각 처형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전혀 설 곳이 없으며 다른 교인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감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져야한다.” 고 보고하였다. 북한 정부는 중국에서 송환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하고 ‘기독교 전파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였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오픈도어즈 USA에 따르면 한 탈북자는 그녀의 가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후 ‘문제가 있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었고 부모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수들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중국에서 송환된 뒤 수감된 또 다른 여성 탈북자는 같은 NGO에 교도소 간부들이 반복해서 중국에 있었을 때 교회를 갔었는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캐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여성은 만약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면 처형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면, 구금 시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행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실종된 사례가 2016 년에 보고됐다. 국제 NGO 들과 탈북자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 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에서 발간한 2018 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와 종교 활동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연관된 주민이나 탈북자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았다. 당국은 미신 행위에 연루된 자에게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처벌은 뇌물을 이용하면 무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 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북한 당국은 파룬궁 신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소식통은 파룬궁이 무역상들을 통해 북한에 들어온 뒤 빠르게 퍼졌는데 심지어 고위 정부 관리와 그 가족들 사이에도 전파되었다고 말했다. 4 월 경찰이 주민들에게 파룬궁 신도일 경우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처음있는 조치였다. RFA 는 해당 지침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한 조치 이후 경찰은 평양의 선교구역에서 파룬궁 신자 100 명을 체포하였고 복수의 소식통은 단속과 부정적인 보도가 오히려 파룬궁의 인기를 더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었다. 2018년 12월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석방 협상을 시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들 중 1명은 2013년부터, 2명은 2014년부터 억류된 상태이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이전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정부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지도자의 최고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일종의 국가후원 신학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북한 전역에 약 10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의 2016년 백서에서 한 탈북자는 “북한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억압하는데 이는 1인 독재체제가 종교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2014년 COI 보고서는 기독교가 북한의 개인 우상화 정책에 반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탈북자를 돕는 자선 단체인 링크 (Liberty in North Korea, Link) 는 웹사이트에 북한 정부는 조직화된 종교를 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탄압·박해가 심해졌다고 계속해서 보고했으나 현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NGO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관용을 베푸는 시늉을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연구원은 연례인권백서에서 “북한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서는 “관계당국은 종교 전체를 미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모든 미신적인 행동은 금지된다”라고 말한 탈북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헌법은 명목상의 자유만을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허용하며 그 또한 북한 정권이 이를 정책적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에만 주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년과 2018년 3월 사이 12,625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6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없다고 답했다.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880명의 탈북자 중 1퍼센트 미만이 종교 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주민이 민방위에 참여하고 기꺼이 국방에 동원될 것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전무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순교자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가 9월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 영상자료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스파이” 그리고 “종교적 광신도”로 그려졌다. 해당 영상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색출하고 입을 막을 것인지를 국가보위부 직원들에게 가르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8년 기준 북한 내 121곳의 종교 시설이 있다고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불교 사찰 60곳, 천도교 교당 52곳, 국영 개신교 교회 3곳,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성당 1곳이 포함되었다. 통일연구원의 2015년 연례백서는 60곳의 불교 사찰이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불교 사찰을 종교 시설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찰들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로 여겨졌다. 통일연구원의 2019년 연례백서는 평양 외부에는 종교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통일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하여 인가된 종교 단체를 대외적 선동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주민들은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장소를 대개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로 인식했다.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부족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종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통제하는 평양 소재의 기독교 교회는 5 곳이 있는데 3 곳의 개신교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 천주교 성당 (장충 성당), 그리고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소속의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개신교 교회인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예배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과거 평양 시내 또는 근교에 살았던 일부 탈북자들이 이들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평양에 살았을 때, 찬송가를 들으려고 교회 밖에 너무 오래 얼쩡거리거나 매주 예배가 진행 중일 때 그 근처를 꾸준히 지나다닌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예배 시 찬송가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허가함으로써 교회에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당국이 재빨리 알아차렸으며, 이러한 결과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기독교 신자가 부활절 주일에 교회를 찾았을 때 문이 닫혀 있었으며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교회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iNK는 홈페이지에 “외국인 방문자들을 위한 허울뿐인 종교적 자유를 내세우기 위해 지어진 형식적인 교회 이외에는 허용된 것이 없다”라고 적었다. 오픈도어즈 USA는 2018년 북한 내 종교 박해 보고서에서 “평양에서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교회들은 선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 의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신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교회를 다녀갔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도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국이 이들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정부의 2002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 개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8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그러한 ‘가정 예배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탈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8 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언급된 12,810 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3 퍼센트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믿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 년 보고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회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2015 년 남북 종교간 교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히 미미했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충성당에서 기본적인 의식을 거행하지만 바티칸 교황청은 이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교황청이 인정하는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 혹은 수녀 또한 상주하고 있지 않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로 체재하는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일설에 의하면 5 명의 러시아정교회 사제들이 북한에 체류중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정백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제 중에는 북한인도 있으며, 그 중 여러명은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COI 보고서는 당국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월에 UPI 는 국영언론 려명이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주일미사를 보도한 것을 인용했다. 려명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외국인 신도가 참석했다. 해당 보도는 미사 중에 반미구호를 외치고 기타 정치적 발언을 한 사제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 관계자들이 항구, 세관 검문소, 공항에서 종교적 물건이나 기타 정부가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물품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소포 및 소지품을 철저히 검색한다고 보고했다. 오픈도어즈 USA 는 일부 개인이 성경과 기타 종교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오디오 기기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도 했고 라디오를 밀반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외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개신교와 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 년제 대학 과정, 김일성대학 종교학과,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 기독교 혹은 불교 교단과 연계된 기타 신학대학 등 특정한 형태의 종교 교육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계급과 출신 성분, 정권에 대한 지지를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는 ‘성분’ 제도에서 종교는 개인을 최하층 성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계속해서 이용되었다. 성분 분류는 교육, 의료, 고용 기회, 주거 등의 분야에서 차별로 이어진다. 통일연구원은 종교인과 그 가족들은 “반동분자”로 여겨진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서구 외세의 침입 수단으로 간주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사회과학원의 “철학사전”이 “종교는 역사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장악해 왔으며 착취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저개발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당국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적발하는 방법을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AP 통신의 2018년 기사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선교사 수십명이 북한 주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종교 교육을 했으며, 이들 선교사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나 조선족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선민네트워크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10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으며 북한 정부가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는 그와 같은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경통제를 계속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교에 기반한 일부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계속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포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현지 주민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정부 수행원이 항상 동행했다고 보고했다. 10월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의 기독교 자선단체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로 원조를 거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선단체들이 지하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밀리에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보도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말 기준 교황이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없었다.

12 월 유엔총회는 미국이 공동 발의한 “북한 내에서 당국에 의해 오랜기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사상·양심·종교·신념·의견·표현·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UN 총회는 또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례결의안은 안보리가 COI 의 관련 결론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

###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국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활동을 이웃,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가족들이 주일에 조용하게 기독교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밀고자가 있을까봐 한 명은 망을 본 경험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화장실이나 이불 밑에 숨어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스 USA 는 다수의 성경, 기도서, 기독교 서적, 찬양노래집 등이 1920 년대부터 세계 1 차대전 종전 사이에 출판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서적은 숨겨져서 신도들 사이에 전해져 왔다. 한 남성은 사람들이 신고될 것이 두려워서 기독교를 전도할 때는 가족간이라도 조심한다고 말했다. NGO 에 따르면, “예배를 보기 위해 다른 기독교인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부 신도가 감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져야한다.”

8 월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발표하였다.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조선) 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전세계 그리스도교인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2017년에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수치화하기 어려웠다. 일부 NGO와 학자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고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각의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주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와 NGO의 보고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종교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비밀 종교 회합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NGO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결혼이나 장례 등과 관련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기타 소식통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여전히 샤머니즘적 요소가 남아있음을 알려주었다.

####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과 관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2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6월에는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또 다른 회담을 했다.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7 월 워싱턴 DC 에서 열렸던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교를 가진 모든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는 12 월에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여타 다자간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10 월 브뤼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행동을 조율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그리고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등 북한 관련 NGO 들과 만남을 가졌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되었다. 2019 년 12 월 18 일에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무역법(1974 년 제정)(잭슨-배닉 수정조항) 제 402 조와 제 409 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